

대법 무죄 선고 야권통합 역할 커진 박지원 의원

“호남의 정치적 미래 위해 역할 하겠다”

지난 18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무소속 박지원 의원(목포시)의 정치적 주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에서 경쟁적으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총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커졌다. 지역 민심도 야권 분열 상황에서 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뤄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법적 족쇄에서 벗어난 활기찬 마음을 토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야권 분열과 남북관계 파탄 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법원 판결 직후, 국립 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소를 참배했다.

▲하늘에 계신 DJ께서 저의 결백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보고 드렸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회호 여사께서도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고 크게 기뻐하셨다.

-야권 분열의 현실은 참담하다.

▲DJ가 하늘에서 통곡하실 일이다. 그동안 호남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하지만 자기 고향에서 표도 못 얻는 자들이 분열하고 호남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권 분열의 원인은.

▲친노 패권주의와 문재인 전 대표의 욕심 때문이다. 지도자가 엄중한 상황을 판단 못하고 야권 분열이 현실로 닥쳐오는 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해 적국의 현실을 맞게 됐다. 박지원이 싫었다면 안철수, 천정배 의원 등에게 양보하는 결단으로 야권 분열을 막아야 했다. 지도자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총선에서 야권 통합과 연대를 주장해 왔다. 이제 재야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공천이 확정되면 연대와 통합의 길이 보일 것이다. 양 측 후보들이 연대 없이는 패배라는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결국, 후보들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권 교체에 요구하는 민심이 총선 승리를 위한 연대 및 통합을 요구할 것이다. 생존의 현실과 민심이 결국 연대를 이루게 할 것이다.

-호남 민심이 야권 재편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편의 함의를 어떻게 보는지.

▲호남 민심이 이제 더 이상 '묻지마 지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민주나 국민의당 지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은 김대중·노무현이 아니다. 호남이 물표를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를 이끌기보다 정치적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호남은 생존 차원에서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 야권에 대한 절망으로 호남 민심이 분열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고 무서운 지점이다. 호남 민심의 분열은 야권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의미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야권 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연정과 'DJP 연합' 등을 언급했다.



야권분열·남북관계 파탄 우려

총선서 무소속으로 완주 계획

친노 패권주의 후보 낙선 운동

▲표판 주지 말고 호남의 가치와 몫을 찾자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 후보와의 연정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호남 민심이 단결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지지'가 아닌 전략적 지지로 호남의 몫을 찾아야 한다. DJP(김대중+김종필)연대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호남의 지지를 토대로 인사와 예산, 정책적 지원 등을 보장받고 이끌어 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호남의 몫을 찾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DJ 이후, 호남 민심은 노무현·문재인 등 야권 대선 주자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호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호남이 또 다시 정치적 '봉'이 돼서는 안 된다. 호남 주자의 단독 집권이 안 되면 야권 주자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실리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완주할 것인지.

▲현재는 무소속으로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정

당에 합류한다면 중립적으로 통합에 나서기 어렵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래를 확정지을 수 없다. 더민주나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다면 조직의 지원 등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통합의 길을 가겠다.

-총선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친노 패권주의에 복무하거나 영합한 후보들을 호남 민심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에 맞서는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정권교체 없이는 남북관계 복원이 상당히 어렵게 됐다. 6·15 합의와 햇볕정책이 잘 유지됐다면 남북 관계는 크게 진전됐을 것이다. 9·19 합의만 잘 이행됐더라면 남북관계 파탄을 피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의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사드 배치는 최악의 선택이다. 하지 않아야 한다. 대화가 최선이다. 속아주면서도 달라고 대화해야 한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야 한다. 이미 소련과 동독에서 답이 나온 것 아닌가. 큰 호흡으로 가야 한다. 대결 국면만으로는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민주의 대응이 신통치 않다.

▲60년 전통, 야권의 적자를 자처하고 있는 더민주의 행태를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시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걸었던 정당이 평화통일의 기치를 버리고 '북한이 궤멸한다' '햇볕정책이 실패했다', '김대중도 재벌 경제를 했다'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당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절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총선에서 수도권도 문제지만 영남도 심각하다.

▲DJ는 영남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설득했다. 당시, DJ가 명함을 주면 던져버리고 찢어버렸다. 악수하면 손을 털어버렸다. 60%가 그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흥분하면 오히려 DJ가 나를 달랬다. 현재 야권 지도자 가운데 누가 영남에서 헌신하고 있나. 길이 없다.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한심하다.

-대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호남에서 그런 대선 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겠다. 야권의 '메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호남의 정치적 미래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무슨 역할이라도 하겠다.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감이 크다.

▲그동안 호남 의원들은 치열한 노력과 도전이 없었다. 프로 정신이 부족했다. 매너리즘에 빠져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호남 민심의 분노는 피해갈 수 없는 업보다. 결국 야권은 통합된다는 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호남의 미래를 위해 당 보다는 인물을 보고 냉정한 선택에 나서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윤정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시장 “차 100만대 생산기지 지원을”

이지사 “유엔기후변화총회 여수 개최”

靑 시·도지사 간담회서 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도

윤정현 광주시장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경전선(慶全線) 전철화,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유엔기후변화총회 여수 개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목표-제주 해저터널 건설 반영 등을 요청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 박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우선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부시장·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

처하러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단체장을 1~2명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단체장 정원은 서울·경기만 3명이고 나머지 시·도는 2명이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건의도 잇따랐다. 이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으로 절박하지만, 지자체로서는 세수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고 환경 훼손과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며 “따라서 중앙정부의 특단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에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당사를 방문,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윤영기·윤현석기자 penfoot@

이낙연 전남지사, 투자유치·우호교류 美 순방

22~25일... 교류협력 방한협의도

이낙연 전남지사는 22일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 D.C., 뉴욕,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등 미국 동부 4개 지역 순방길에 오른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메릴랜드주와 기존 우호교류협약을 연장하고, 버지니아주와 신규 우호교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특히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테리 맥컬리프(Terry McAuliffe) 버지니아 주지사와 각각 회담을 통해 통합의학, 바이오백신, 바이오캐



미컬 등 전남이 중점 추진하는 산업 분야 교류협력 방안도 협의한다.

세계 최대 금융도시인 뉴욕에서 미국 내 최대 한인식품 소매체인망을 운영하는 에이치마트(H-Mart)와 전남산 농수산물품 100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등 전남지역 관련 사업 투자에 관심을 가진 플린(Flynn)사와 알린다(Alinda)사 시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 / 010-3608-8897